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문의 : 참여연대 박원석 : 720-5300)
제 목 '양심수 논란'에 대한 논평
날 짜 1997. 11. 3. (총 1쪽)

양심수 부정론, 그릇된 사상시비를 우려한다

- 양심수 논란에 대한 논평 -

.....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양심수 석방'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정치권이 그릇된 기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그 여파가 심히 우려된다.

'양심수'에 대한 국제적 정의와 통용 기준은 "자신의 양심과 정치적 견해에 따른 행동으로 구금된 사람"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김대중 총재를 비롯해서 '폭력사용 여부'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성숙한 인권관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 대통령 만델라는 세계적인 양심수가 아니라 단지 폭력사범에 불과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일부 정치권이 이같은 기준으로 '양심수 부정론'을 펴는 것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군부독재 아래서 공안통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양심수가 없다'는 주장에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이다.

양심수 석방 여부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신 정부 초기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당연히 추진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양심수 문제가 사법질서를 넘어서 국민의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정 정치인이 발언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사상적 이중잣대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특히 이번 논란이 과거의 그릇된 사상시비로 재현될 조짐이 보이는 것에 깊은 우려와 경계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여론몰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모든 후보가 양심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뚜렷히 밝히고 공개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의 주제로 삼기를 바란다. 이에 앞서 정부당국은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수 기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양심수의 기준에 대해서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각 당과 후보자는 국민통합 차원의 양심수 사면에 대한 정책을 국민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